

산업보건 주요뉴스

소규모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 대해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비용 지원

고용노동부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일용근로자 17만 5천명에게 무료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법제화되어 '12년 6월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어 '14년 12월부터는 3억원 미만 현장까지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자비로 교육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전국 73개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서 일하고자 하는 일용근로자가 1회만 이수하면 되는데, '14년 12월말까지 약 145만 명의 건설근로자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이수지원 참여방법 및 교육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지원사업 안내 팝업창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업기초교육기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실(052-703-0676)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 수립

하청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원청의 사업과 본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인 사내하청업체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원청도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밀폐공간 작업과 같은 위험 작업의 경우에는 사전 작업허가제를 도입하여 원청-하청업체, 하청-하청업체 등 상호간 위험관리 및 의사소통이 강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정부의 안전보건정책 목표도 사망사고 등 중상해 재해 중심으로 명확히 하여 중대재해 감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한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2~4배 가량 높은 사고사망률(사고사망만인율: 근로자 만명당 사고사망자수) 수준을 낮추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체제 및 안전의식의 정착을 위해 정책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출발하였다.

산업안전보건 혁신 4대 추진 전략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 근로자, 정부 등 각 주체별 안전보건 책임의 명확화

(기업)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사전 작업허가제를 도입하여 원-하청간 상호 위험관리를 활성화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외부 위탁 및 안전보건관리자 겸직 제한 추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지원자』제도를 신설한다.

(근로자) 작업유형별, 공정별 해당 근로자 대표에게도 위험성평가 참여를 의무화*, 현장책임자에게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한 작업제한권을 부여한다.

(정부) 중대재해예방 중심으로 정책목표 전환(現 재해율 → 사고사망만인율 등), 사고 다발 패턴을 선정하여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재해예방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예방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민간 재해예방기관(안전협회, 보건협회 등 970여개)의 역량을 강화한다.

산업재해 유발 요인에 대한 선제적 안전보건 대응 능력 강화

(제조·건설업) 안전 인증 및 검사제도 개선을 통한 위험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기반을 구축하고, 사고사망자의 약 25%를 차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대상별) 신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장년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 4대(정리·정돈·청소·청결) 실천운동을 실시하는 한편, 여성 다수 고용 업종 중심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新 재해요인 관리) 직무스트레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발암성·생식독성 물질 관리를 강화한다.

법령, 정보시스템 등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

(산업안전보건 법령) 사업주, 근로자들이 법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업종·유해인자별 특성 등을 반영한 법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노사정위 논의를 통해 강구하고, 법 적용범위의 확대(現 근로자 → 모든 일하는 사람) 방안도 검토한다.

(지식·정보) 고용부·안전공단·민간기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안전보건정보를 통합·공유하는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안전산업 육성) 중기청, 산업부 등과의 협업을 보호구 생산 업체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거버넌스 구축) 주요 업종별·산업단지·지역별 안전보건리더십을 확충하고, 공공부문 안전보건 리더십도 구축한다.

안전수칙이 실천되는 안전보건문화 확산

(안전교육) 이론·강의 위주에서 실습·사례·현장교육 등 작업현장 중심 교육으로 개편, 산업별·지역별 안전보건교육체계를 구축한다.

(실천공감대) 사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산업현장에서 산재은폐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현장중심의 노사정 공동 노력도 펼쳐 나간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4대 전략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했을 경우 동 종합계획 시행이 완료되는 '19년에는 사고사망만인율이 선진국 수준인 0.3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4년 산업현장 사망사고 대폭 감소

- 제조업·건설업은 감소, 기타산업은 증가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작업하다 법령을 위반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수는 756명으로 '13년에 비해 150명(16.6%) 감소하였다.

업종별로는 최근 5년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던 건설업에서 사망자가 114명(22.5%) 감소하여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서비스업, 임업 등 기타업종에서는 사망재해가 2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추락 등 일반적인 사망재해는 127명(15.5%), 질식 등에 의한 사망재해는 27명(58.7%) 감소하였으나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에 의한 사망재해는 전년과 동일(40명)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자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사고는 14건 발생하여 30명이 사망하였으며, 전년 대비 63명(67.7%) 감소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작년에 사망재해가 크게 감소한 것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원청의 하청근로자 안전관리책임 확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등 강력한 제재 등의 정책효과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그동안 계속 증가하던 건설현장 사망재해가 작년에 감소로 전환된 것은 건설업 본사 중심의 재해예방활동과 자치단체 등 공공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재해예방 노력의 결과로 분석되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등 많은 공공발주기관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특화된 사업을 적극 전개하였다.

건설현장 안전경험 살리세요

- 건설현장 안전경험 살린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마련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경험을 살리고, 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5년도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를 모집한다.

건설현장 안전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현장 안전보건 지킴이」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강화하고, 관련 은퇴자에게 사회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모집대상은 만 55세 이상의 건설현장 안전분야 경험이 있는 은퇴자로 모두 2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인원은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시설과 근로자 보호구 착용 여부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실시하며, 급박한 재해발생 위험이 있거나 안전시설이 현저히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개선 활동을 유도한다.

일반적으로 다세대 주택, 원룸, 상가 등의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단기간의 공사와 안전보건에 대한 경제적인 취약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쉽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건설현장 산업재해자 69,731명 중 120억 미만의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62,156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89.1%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 안전분야 경험이 있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를 선발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재해예방 활동에 나선다.

올해 모집인원은 지난해 모집인원인 130명에서 70명을 늘렸으며, 대상 현장도 지난해 공사규모 50억원 미만에서 올해는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현장으로 확대했다.

모집접수는 오는 2월 3일(화)까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2.16일(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2월말부터 7월말까지 약 5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근무성적이 우수할 경우 약 5개월간 근로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근무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주 5일 이내에서 근무 희망일 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5일제 근무를 기준으로 매월 약 1백 5십만원 정도의 보수와 함께 출장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한편, 공단은 2010년부터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사규모 50억원 미만 소규모현장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5만회에 가까운 순찰 활동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자수는 전년보다 약 16명이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